

한미FTA 재앙에 반대하는

금속노조

파업은

저다 하다

왜곡보도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 관련기사 2, 3면

자이툰 파병 연장,
비정규직 악법 시행,
민주노동당 탄압도 중단하라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한
총궐기의 날

일시: 6월 29일(금) 오후 3시
장소: 서울 도심



자이툰 파병
연장 시도 중단하라
- 임종인 의원 인터뷰

6~7면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 '진보대연합'을 향한
힘찬 출발

5면



한미FTA 반대 투쟁
- 한미FTA 저지 범국민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3면

팔레스타인의 위기

6~7면

BDA 해결 이후의 한반도

8면

존 몰리뉴 칼럼
- 국제 공산주의 운동 I

9면

국제
- 남아공 총파업
- 프랑스 총선 평가

8, 10면

비정규직 악법과
노동자 투쟁

11면

<맞불> 온라인 기사

이라크 석유 노동자 파업 승리
이라크 석유 노동자들이 미국과 친미
이라크 정부의 석유 산업 사유화 계획
에 제동을 걸다

죽음의 임시 경쟁 트라이앵글
임시 경쟁의 대안은 내신도, 수능도, 본
고사도 아닌 임시 철폐이다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라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참으로 참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당 밖이 아니라 당 안의 우군이 네 거티브 공세에 여념이 없다는 사실”
- 이명박

“그분은 목사님으로 나라가 어려울 적에 많이 도와줬다. ... 구국기도회 하면서 도와줬고 ... 저에게 고마운 분”
- 부패한 정치브로커였던 최태민을 옹호하는 박근혜

“명박 삼천지교 ... 한국적 정서에서 자녀 교육 목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이명박의 위장전입을 변명해 주는 <중앙일보>

“대한민국 언론은 박근혜·이명박 광고하는 ‘짜라시’들이나.”
- 한나라당 홍준표의 볼멘소리

“이명박, 박근혜 양 세력은 더 이상 함께 정치를 할 수 없을 만큼 갈라졌다. 이미 분열은 이뤄진 것”
- 정치 컨설턴트 ‘민’ 박성민 대표

정동영: “고통스러운 살신성인의 결단”
민병두: “통합에 관한 한 그는 법이 자 길이 될 것”
김영춘: “대한민국의 정신적 대통령은 그의 몫”
- 김근태의 불출마 선언을 찬양하는 열우당 정치인들

“현재 받는 임금은 ...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면 74만 3천1백40원입니다. 한 달에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38만 원, 두 아이 교통비 16만 원, 고등학생 급식비 10만 5천 원이 들어갑니다. 물가는 한없이 올라가는데 여성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 최저임금 동결에 항의하는 여성연맹 경인지역 여성노조 청소용역지부장 최순기 씨

현대차 파업 반대 목소리는 다수가 아니다

최근 보수 언론들은 마치 현대차 노동자들이 대부분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양 왜곡 보도하고 있다.

물론 조반장들이 한미FTA 저지 파업 반대 서명을 받고 있고, 몇몇 대의원은 파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대의원이었고 울산북구의회 부의장이었던 김재근 씨도 파업 반대 유인물을 내고 <조선일보>와 인터뷰까지 했다.

그러나 조반장들은 예전부터 중간관리자로서 항상 사측의 입김에 조종당하거나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김재근 씨는 지난해 공천 탈락한 후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사람이다.

파업 반대 분위기는 결코 다수가 아니다. 2공장에서는 파업 반대 대자보를 붙인 한 대의원이 소위원, 활동가들의 비판을 받고 결국 사퇴하기도 했다.

6월 11일에는 이상욱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과 대의원들의 간담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대의원 서너 명이 “정치 파업을 반대한다”, “왜 자동차만 파업해야 하나”, “현장 분위기가 안 된다” 등을 주장했다.



보수 언론들은 올해 초 현대차노조의 성과급 투쟁 때도 왜곡을 일삼았다

정동석 현대차 4공장 대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재벌들은 정치인들에게 뒤통 주면서 정치에 개입하는데 왜 우리 노동자가 정치 파업 하면 안 되냐?”

불균등

“노동자들의 의식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몇몇 조합원이 파업에 반대할 수 있지만 모두 파업에 반대할 거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독일의 금속노조 IG메탈은 일백 년 가까이 싸워 왔고 지금은 수백만 명의 조합원들이 노

조로 조직돼 있다. 현대차부터 앞장서지 않으면 언제 독일 금속노조처럼 될 수가 있겠는가?

“기아차 화성공장에서는 대의원들과 활동가 70여 명이 한미FTA 저지 실천단을 조직해 파업을 건설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욱 지부장은 단호하게 파업을 조직하고, 대의원들은 지지를 해야 한다.”

그러자, 정동석 대의원의 주장을 지지하는 대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상욱 지부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파업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파

업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또한 FTA 반대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많다. 그래서 정동석 등은 한미FTA 저지 파업에 반대하는 대의원과 조반장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자보를 붙였고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만든 파업 지지 유인물에 많은 대의원들이 지지 연서명을 해주고 있다.

이상욱 지도부도 파업 반대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파업을 단호하게 조직해야 한다. 그럴 때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한미FTA 반대 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정부는 파병 종결 약속을 지켜라”

오늘(19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자이툰 부대] 즉각 철군·임무 종결 계획서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50여 명이 참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자이툰 부대 임무 종결계획’을 어기고 또다시 파병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에 크게 분

노했다.

또, 이라크인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권 등 경제적 이익을 명분 삼아 파병 재연장을 획책하는 것을 규탄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지역재건 팀 형태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파병 연장의 또 다른 꿈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와 서울대의 내신 투쟁

평준화를 무력화시키려는 ‘명문’ 대학들

내신 실질반영률을 50퍼센트로 높이려는 교육부에 맞서 서울대가 내신 2등급 학생까지 만점을 주는 입시안을 고수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 지원을 끊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신 무력화’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서울대가 ‘총대’를 메자 연·고대 등 주요 사립대학들도 내신 1~4등급 학생까지 만점을 주는 입시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연세대는 18일 열린 입시설명

회에서 “교과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내신을 무시하는 입시안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사립대들은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이번에 발표한 초강경책[내신 위주 선발]이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이번 기회에 특목고와 강남 지역 학생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확고히 하려 한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획일화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교육부의 내신 위주 정책이 시대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며 특목고와 강남 지역 학교에 유리한 고교등급제·본고사로 학생들을 뽑겠다고 위협하고, 결국 절대평가였던 내신을 상대평가제로 바꿔 같은 반 친구들끼리도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하는 ‘2008년 입시안’을 만든 게 서

울대를 비롯한 ‘명문’ 대학들과 우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신을 무력화하고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입시안을 내놓는 것은 결국 어떻게든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강남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 선발하겠다는 셈이다.

따라서 “내신 무력화는 고교등급제로 가는 길”이라는 노무현의 주장 자체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의 언행은 전혀 일치

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들의 ‘내신 무력화’를 방조했다. 올 초부터 대학들이 수능 위주 입시안을 하나둘씩 발표할 때, 내신 중심의 입시가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이를 눈감아 준 게 교육부였다.

게다가 교육부는 국제고·국제중학교를 만들고, 특목고를 늘리는 등 고교평준화를 흔드는 데도 일조했다.

물론 내신 위주 선발도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대학서열화가 유지되고 학생들이 더 높은 서열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입시 경쟁 체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동훈

박석운 한미FTA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기층 대중의 투쟁으로 한미FTA를 막아냅시다”



지난 16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 제의했다.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던 노무현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 협상이라고 말장난을 하며 협상 체결에 목을 매고 있다. 6월 말 한미FTA 저지 투쟁의 의의를 박석운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에 들어 본다.

한미FTA 운동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미FTA 협상은 밀실 협상으로 진행돼서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지난 1년 4개월 정도 투쟁을 거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FTA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는 점이 성과죠.

그런데 한미FTA 반대 운동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미FTA의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죠. 협정문도 5월 25일에 [뒤늦게] 공개됐는데, [한미FTA 반대 운동은] 공개 전에 ‘카더라’ 식의 정보를 분석해서 그 실상을 알릴 수밖에 없었죠.

아직 현실에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일반 국민들이 실감을



6월 2일 한미FTA 반대 집회

못하고 있어요. 국민 중에서도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 중소 영세 상공인들이 한미FTA의 파멸적 효과에 대해서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크겠죠.

또 하나의 요인은 한미FTA에 제도적 변화가 많다는 점입니다. ‘투자자 정부 제소권’이나 ‘네거

티브 리스트’, ‘미래 최혜국 대우’ 등 대규모 제도적 변화의 효과는 아직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미래에 나타나죠. 광우병도 그 위험이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죠.

한미FTA 반대 운동은 이런 한미FTA의 효과를 가시화해서 보여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금속노조의 6월 말 파업을 앞두고, 우파 언론들이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파업은 정치 파업이죠. 금속노동자들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놓고 파업을 하는 건 아니죠. 그보다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반(反)노동자적이라고 보고 투쟁에 나서는 거예요.

언론들이 어떤 때는 집단 이기주의의 투쟁한다고 비난하고, 정치 파업하면 정치 파업한다고 비난합니다. 언론들은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오랜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은 정치 활동·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퍼졌는데, 언론들은 이를 이용해 노조와 일반 국민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6월 말 한미FTA 체결 저지 투쟁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4월 초 타결 후에 대중 투쟁이 소강 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도 있고, 1년

이상 진행된 투쟁의 피로도 있었을 것이고, 농민들이 농번기라서 바쁘고, 노동자들도 임단투 준비 때문에 투쟁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웠죠.

그동안 교육·선전, 조사·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해 왔는데, 이제 6월 29일 힘을 모아서 대규모 체결 저지 투쟁을 앞두고 있죠. 충청·경기·강원 등 중부권까지 모두 서울로 집중하고 농활 간 학생들까지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쟁은 한미FTA 이슈를 다시 [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으로 만드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9월에 비준 시도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때 비준 저지 투쟁을 하고, 10 i 12월 대선 국면에서 핵심적인 대선 쟁점으로 만들어 승부를 거는 투쟁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협정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구체적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층 대중을 발동해서 투쟁들을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망국적인 한미FTA를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정리 강동훈

한미FTA 반대 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사용자들과 보수 언론들이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파업을 무산시키려 “미쳐 날뛰고” 있다.

그들은 특히 금속노조의 ‘선봉’인 현대차지부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 중 가장 역겨운 것은 한미FTA로 “[자동차 노조원들이] 일자리가 안정되고 수입도 늘어나는 등 ...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조선일보>의 논리다. 파업은 “굴러들어오는 복을 걷어차 버리겠다는 것”이란단.

그러나 한미FTA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지는 확실치 않다. 이미 미국 현지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을 통해 일본 자동차 수입만 늘어날 거라는 말도 많다.

실사 대미 수출이 늘어나도 자동으로 노동자들이 “덕보는” 것도 아니다. 지난 몇 년 간에도 자동차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모퉁이 속에서 고용불안이 심해지고 비정규

직이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수입을 지켜준 것은 바로 투쟁과 파업이었다.

무엇보다 한미FTA의 핵심은 ‘구조조정’에 있다. <조선일보>도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경쟁 체제를 만드는 일”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단칼에 수만 명을 해고하는 GM과 “마른 수건도 쥐어짜다”는 도요타와 경쟁하기 위해 구조조정하자는 게 한미FTA다.

한미FTA가 가져 올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과 물·전기·가스·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요금 인상도 노동자들에게 손해다. 따라서 “한미FTA는 노동자의 고용과 삶의 질을 파괴”한다는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의 주장이 옳다.

보수 언론들은 또, 이번 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선동이다. 이번 파업은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들이 민주적 토론 끝에 압도적 지지로 결정한 것이다. 진정 비민주적인 것은 국민의 눈·귀·입을 막고 진행된 한미FTA ‘묻지마’ 협상이다.

‘묻지마’

보수 언론들은 정치 파업을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경제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한다. 결국 경제 투쟁이든 정치 투쟁이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재벌은 정치인에게 검은 돈을 주면서 정치에 개입하는데 왜 노동자는 정치 투쟁을 하면 안 되는가.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민중의 삶에 크게 해로운 영향을 줄 한미FTA에 반대해 정치 투쟁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것이다.

보수 언론은 금속노조 내에서도 지

부·정파에 따라 파업에 대해 심각한 이견과 갈등이 있는 양 왜곡·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월 13일 금속노조 소속 19개 지부장들은 정파를 뛰어넘어 언론의 왜곡을 비난하며 파업 사수를 결의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한미FTA 반대 여론은 여전히 30퍼센트가 넘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사회·학생 단체들이 금속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파업은 산별노조를 무시하고 협상장에 나오지조차 않는 자동차 4사 기업주에게 금속노조의 힘을 보여 줄 기회다. 산별노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번 파업은 성사돼야 한다. 현장 활동가들은 정부와 언론의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파업을 건설해야 한다.

19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 20주년인 지금, 민주노총의 선봉 부대인 금속노조가 앞장서서 노동자·민중에게 “굴러들어오는” 한미FTA라는 재앙을 “걷어차 버리”자.

전지윤 · 정종남

정유사와 정부 모두 고유가의 주범이다

지난 1월 평균 1천4백10원이던 휘발유 값이 6월 현재 1천7백68원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기름 값이 폭등하자 기름 값 인하를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에 12만 명이나 참가했다.

물론 부시의 더러운 학살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을 감안한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와 정유업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원유 가격이 10퍼센트 오를 때 정유사들의 중간 이윤이 60퍼센트 가까이 폭등한다고 폭로했다.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정유사들은 잦은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해 왔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짭싸게 국내 가격을 더 많이 올리고 국제 가격이 하락해도 국내 가격은 조금씩만 내렸다.

정유사와 함께 정부도 고유가를 만들어 온 주범이다. 휘발유 소비자의 60퍼센트가 세금이다. 서민들이 주로 쓰는 기름보일러와 석유난로에 필요한 등유에는 사치품에 부과하는 특소세까지 붙는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석유 관련 세금은 25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20퍼센트에 달했다. “기름 대신 세금을 주유한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 인하는 절대 안 된다며 버티고 있다.

공공재

정부는 “시장 가격 원리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며 ‘비싸면 쓰지 말라’는 협박까지 한다. 이미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6백만 대를 넘어 휘발유는 생필품과 다름없는데도 말이다.

자동차 한 대에 가족의 생계가 달린 생계형 운전자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까지 나오는 기름값으로 고통받는다. 2005년 한 화물 운송노동자는 기름값 인상 때문에 분신까지 했다.

물론 NGO인 ‘에너지전환’ 대표 이필렬 교수의 지적처럼 한국의 석유 소비가 “미친 수준”일지 몰라도, 주범은 자동차를 가진 보통의 노동자들이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 전체 석유 소비에서 산업 분야 비중이 43퍼센트(2004년 기준)로 IEA 평균치의 2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휘발유 세금이 리터당 8백69원인 반면,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중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60원에 불과했다.

교통세·주행세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게 아니라, 기업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부유세를 도입하는 게 옳다. 이 돈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하하고, 자가용 없이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대안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늘려 산업의 석유 의존도 자체를 줄여야 한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에너지 이용 권리를 박탈당해선 안 된다. 2004년 한 해 동안 1백56만 명이 하루 이상 단전을 경험했고,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촛불을 켜고 지내다 화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최근까지 잇따랐다. 13만 5천여 가구(2006년 6월 기준)가 도시가스 공급 중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이는 전년대비 49퍼센트나 증가한 것이다.

석유·물·전기·가스 등은 누구도 독점해서는 안 되는 공공재다. 따라서 정유사들의 폭리를 보장해주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투쟁과 천연 자원 국유화 바람은 이것이 한낱 꿈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 준다.

승주

“미쳐 날뛰”는 역사의 쓰레기와 배신자들

전지운

이명박이 “나를 끌어내리려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 총체적인 이명박 죽이기가 시작됐다”며 악에 받친 소리를 내고 있다. 재산 은닉, BBK 의혹, 위장 전입 등 추악한 진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되는데 치명적 결격 사유는 없다”던 다짐은 역시 거짓이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 박근혜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도 나올 건 없다. 박근혜에게 “고마운 분”이었다는 최태민 목사와의 부패 고리, 영남대 이사장 시절의 특혜와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다. 오죽하면 열우당이 “박근혜나 이명박이 대선 후보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자신하겠는가.

결격 사유

그러나 이명박과 박근혜에게는 여전히 반노무현·반열우당 정서라는 강력한 버팀목이 있다. 비열한 개혁사기꾼·배신자들이 너무 싫어서 차라리 부패한 한나라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최근 노무현이 이명박을 비난하고 고소한 것도 되레 ‘이명박을 돕는 일’이라는 분석이 많다. 노무현과 싸우면 이명박의 문제점들은 덮여지고 지지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뿌리깊은 반노무현·반열우당 정서가 ‘대통합’ 쇼로 없어질 순 없

아귀다툼하는 부패한 우익과 합종연횡하는 개혁 사기꾼들

다. 이라크 파병·노동법 개악·한미 FTA를 강행한 세력, 한나라당과 손잡고 탄핵을 추진했던 세력, 심지어 한나라당에서 밀려난 세력까지 다 모여서 간판만 바꾼다고 갑자기 ‘민주평화개혁 세력’이 될 리 없기 때문이다. 물론 주도권 다툼 때문에 ‘대통합’마저 쉽지 않을 듯하다.

■ 천정배－대통합 사기극의 ‘밀알’이 될 것인가

한미FTA에 반대해 단식까지 하면서 노무현·열우당과 차별성을 보여준 김근태는 지금 ‘대통합’에 앞장서고 있고 천정배도 이를 뒤따른다.

김근태는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의] … 십자가를 지고 무덤 속으로 걸어가겠다”며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대통합의 밀알”을 자처하고 있다.

“정신적 대통령은 그의 몫”(열우당)이라는 찬양까지 나왔지만, “낮은 지지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며 통합의 주도권을 노린 계산”(민주당)이라는 분석이 더 그럴 듯하다.

천정배도 열우당·민주당·문국현·손학규까지 끌어들이는 ‘대통합’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FTA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지만 “FTA에 대한 입장 차이가 대통합의 장벽이 되어선 안 [되]”고 “중도개혁 세력을 광범하게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걸음”

사실 천정배는 열우당 창당 주역으로서 노무현의 ‘개혁 사기극’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2004년에 열우당 원내대표였던 천정배는 ‘4대 개혁’(국가보안법, 언론 개혁, 사학법, 과거사 청산)에 대한 한나라당과 우익의 반발에 굴복했다.

당시 천정배는 “4대 개혁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고 야당을 존중한다”며 ‘연내 불처리와 여야 대타협’을 합의했

한미FTA를 찬성하는 손학규와도 통합 하자고?

다. 반면, “이라크 파병 연장안을 여야가 함께 처리해 국민 앞에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이자”고 제언했다. 파병 연장안이 통과된 후에는 “이제 노동법들이 남아 있다”며 노동법 개악 의지를 드러냈다. 심지어 ‘테러방지법’까지 추진했다.

법무장관 재직 때 천정배는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지만 우익이 반발하자 “실정법인 보안법을 무력화시켜서는 안 되고 …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을 지휘한 것뿐”이라고 둘러댔다.

‘삼성 X파일’ 수사 때도 법무장관 천정배는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며 ‘떡값 검찰’을 옹호하고 특검 도입에 반대했다. 법무차관이 바로 ‘떡값 검사’였는데도 말이다.

천정배는 노무현·열우당이 개혁 배신과 개악으로 위기에 처하자 진작부터 민주당과의 재통합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과 우리당은 정책에서 별 차이가 없[는] … 형제당”이기 때문에 “통합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개혁”이라고 했다.

물론 법무장관 때 “한미FTA 반대 시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던 천정배가 뒤늦게 한미FTA 반대 운동에 동참한 것은 환영받을 일이었다. 이로써 그는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에 앞장서 온 열우당 주류와 차별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신자유주의 찬성과 반대 이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한겨레〉2월 22일치)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첫걸음”(〈말〉6월 호)이라며 비정규직 악법을 옹호하기도 했다.

결국 천정배의 열우당 탈당과 한미FTA 반대는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지금 천정배는 개혁 염원 대중을 다시 ‘범여권’ 지지로 묶으려는 ‘대통합’을 지지하고 있다.

한미FTA 반대로 진보진영에 한 발을 담근 후, 다시 개혁 사기꾼들과 함께하려는 천정배의 모순된 행보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이라는 진정한 시금석에 직면해 그 미온적이고 협애한 본질이 입증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 실현 방안을 채택하다

지난 6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입장’(이하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다함께’가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한 지 꼭 반 년 만에 민주노동당은 진보 선거연합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의 ‘입장’ 채택 여부는 진보진영의 지대한 관심사이기도 했다. 민주노동당만으로는 ‘2퍼센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진보진영 인사들은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의 광범한 단결을 위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주문해 왔다.

민주노동당은 3월 31일 열린 제2차 중앙위 회의에서 2007년 대선 목표에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일후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을 추가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당 대선준비위원회 산하 대외협력위는 당내 여러 의견그룹들과 비공식 간담회 및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모아 왔고, 6월 초에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입장’ 채택은 이런 노력의 첫 결실인 셈이다.

‘입장’은 진보의 기준으로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미국의 침략 전쟁 반대, 6·15 공동선언 정신 계승,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실현,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권 보장 및 민주주의 완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런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 “한미FTA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선거연합의 범위)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의 기준

진보대연합의 형태로는 “낮게는 정책연합에서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를 통한 선거연합, 나아가 통합진보신당의 창당에 이르기까지” 열어뒀고, “민주노동당의 기득권에 연연함이 없이 모든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진보대연합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진보진영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진보진영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수정안이 세 개가 나왔지만 모두 부결됐다.



6월 16일 열린 민주노동당 제3차 중앙위원회

장원섭 중앙위원은 ‘입장’의 핵심 내용인 선거연합의 범위와 형태, 방식을 서술한 단락의 삭제를 요구했다(장원섭 중앙위원은 민중참여경선제 현장 발의자이다). 이에 대해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은 “제2차 중앙위에서는 포괄적인 방향만 결정했으나 좀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해야 협상과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삭제를 반대했다.

시기상조를 이유로 “통합진보신당의 창당”을 삭제하자는 김웅 중앙위원의 수정안도 부결됐다. “상대가 있고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김성진 최고위원)에 진보대연합의 형태는 최대한 열어두는 것이 개방적 태도에 더 어울린다.

진보의 기준에 “여성·환경·장애인·성소수자·이주노동자 등”의 문제를 추가하자는 최현숙 중앙위원의 제안도 부결됐다. 그러나 이 제안에 담긴 문제의식은 이후 선거연합의 강령이나 공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결국 ‘입장’ 원안이 재석 2백47명 중 1백37명(55.4퍼센트)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찬성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민중

참여경선제를 지지했던 중앙위원들 중 상당수가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중앙위 회의에서 ‘입장’이 통과됨에 따라 비로소 민주노동당의 진보진영 선거연합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최근 열우당 아류와 변종들이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되사려고 바빠 움직이는 상황을 볼 때, 민주노동당은 열우당 왼쪽의 정치적 공백을 메우는 데 좀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굽이굽이 비탈길

민중참여경선제를 위한 임시당대회 소집 안건은 재석 2백98명 중 1백6명(35.6퍼센트)의 찬성으로 부결됐다.

민중참여경선제가 급진화하는 대중을 좀더 개방적으로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원직선제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두 방식 모두 결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문제일 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민주노동당 당내 경선이 ‘뜨지’ 않는 이

유는 민주노동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가망성이 현재로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 후보 선출 방식 문제인 민중참여경선제를 통해 ‘가라앉은’ 경선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빈약한 전망이었다.

진보진영의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진보진영이 총단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보대연합의 핵심 취지이다. 그런데 민중참여경선제 주창자들이 진보대연합을 “굽이굽이 비탈길”에, 민중참여경선제는 “안전한 지름길”에 비유하며 양자를 대립시킨 것은 부적절했다. 이제는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진보진영의 총단결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당 지도부는 중앙위 직후인 6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진보세력의 총단결과 후보단일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공개 제안하며 진보 선거연합을 위한 힘찬 전진을 시작했다.

박종호(민주노동당 중앙위원)

※ 이 기사의 전문은 <맛볼> 웹사이트를 보시오

구조조정과 투기자본 육성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6월 18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통법)은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등 제2금융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다. 정부는 이 법으로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 간의 구분을 없애고, 인수합병을 통해 한국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만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증권노동자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구조조정이 증권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시킬 것”이라며 자통법 제정에 반대해 싸우고 있다.

자통법은 한미FTA의 ‘자발적 수용’(사전 합의에 따른 별도 시행)의 연장선에서 제정되고 있다. 더한층의 금융시장 개방을 앞둔 제도 정비이자, 자유로운 자본 수익 활동(투기)을 위한 여건 조성인 것이다. 이 법은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됐던 ‘지급결제권’을 증권사도 갖도록 허용한다. 즉, 금융업과 투자업을 하나의 금융기관이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자통법이 사실은 삼성그룹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형

증권사들이 대부분 지주회사로 은행을 갖고 있는데 삼성만 없었기 때문이다.

동북아 금융허브

한편, 자통법은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각종 투기자본 육성 법안 제정과 함께 추진돼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했고, 론스타를 본 떠 국내형 투기자본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동북아 금융허브 계획이 기적같

이 성공하더라도 그 혜택은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 런던이나 뉴욕을 오가는 천문학적 투기자본은 인근 빈민가 하층민들의 필요와 아무 관계 없이 인수합병 시장과 조세피난처를 찾아 떠돌며 자산가들의 배만 불릴 따름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일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노동자들의 노후보장기금을 끌어다 쓰려 한다는 점이다.

한미FTA와 함께 자통법도 막아야 한다.

정종남



‘파병반대의원모임’ 임종인 의원 인터뷰

“파병 연장 움직임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파병반대의원모임’ 임종인 의원은 <타임스> 김용민 기자가 만났다. 임종인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배신을 비판하며 열우당을 탈당했다. 임종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에 시종일관 반대해 왔고, 지난 3~4월에는 한미FTA 타결 강행에 반대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추측과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파병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국민과의 약속, 국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열린우리당 의원 90명이 올해 말까지 철군하는 조건으로 1년 연장에 주겠다고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6월 말까지는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무종결계획서를 내놓겠다는 것은 연말 철군을 전제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64퍼센트나 되는 사람들이 철군을 바라고 있고, 파병 2위 국가인 영국도 철군 또는 감군을 한다고 하고, 폴란드나 이탈리아도 철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같이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세계에 과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만만한 나라인 한국에 또다시 파병 [연장] 요청을 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반미면 어머니” 하면서 자주적 태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에게 취하는 태도는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굴종적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돕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라크 파병은 평화·재건이 아니라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의 드러리 구실을 하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은 애초 유엔의 지지를 받지 못한 불법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는 전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화·재건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이라크에 세 번 다녀왔습니다. ‘재건’을 하려면 ‘파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 아르빌 지역은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건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한국군은 전쟁이 있었던 지역은 가지도 않고 쿠르드 지역인 아르빌에 있는데, 이런 ‘깡패가 선풍한 사람들’ 때리는데 망파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라크 사람들이 60만 명 이상 죽었는데 그 확실 현장에서 망파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적 실익’, 특히 쿠르드 지역의 유전 개발권이나 전후 복구사업 참가를 위해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부는 평화·재건과 경제적 실익을 얘기했어요, 석유 자원

확보, 전후복구사업 참가 따위였죠.

그런데 한국이 파병을 했기 때문에 이라크 저항세력의 표적이 됐고, 그 때문에 우리 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못했습니다. 김선일 씨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선일 씨가 피살된 뒤에 정부는 우리 기업이 이라크 내내 구사업이나 자원확보 등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업이고 사람이고 아예 가지를 못하게 했죠.

오히려 자이툰 부대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지 못한 거죠, 쿠르드 정부가 작년, 재작년 계속 아르빌 공항 활주로 건설 사업이나 아파트 건설 사업에 참가하라고 했지만 정부가 자이툰 부대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즉,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자이툰 부대가 주둔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라도 철군을 해야 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쿠르드 지역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이 쿠르드 지역에 있으면 이라크와 쿠르드족, 터키 사이의 국가간·종족간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터키와 쿠르드 자치정부 사이에 긴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 추진과 더불어 3백50명 규모의 레바논 파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에 본대가 출발할 계획인데요.

레바논 파병은 물론 유엔 결의안 이 있어서 자이툰 파병과 성격은 좀 다르죠,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이스라엘과 미국을 두둔하기 위한 평화유지군 활동이라는 거죠.

게다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가는 곳이 레바논 남부 아넬니까? 지금 무슬림들의 지지를 받는 헤즈볼라와 기독교 민병대, 이스라엘, 레바논 정부군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이나 기독교 민병대 편을 들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러한 파병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침략 전쟁의 틀러리를 서고 있는 게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굳건한 지원 세력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본질을 보여 주는 우스꽝스런 일이지요. 한미FTA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로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지자들의 뜻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우당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철군은 국민의 힘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올 연말에 대선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진보 세력들은 이번 대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지금 국민의 54퍼센트가 파병에 반대하는데, 이런 국민의 뜻에 따르면 의원은 1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국민의 뜻과 국회·정부의 구성이 모순돼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범여권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무엇을 위해, 무슨 차이 때문에 한나라당에 반대한다는 것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이른바 ‘물지마 대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물지마 대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런 국민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와 열우당은 지지자들의 구성이 모순돼 있는 것이고,

재벌, 미국을 위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성도 없이 ‘무조건 한나라당 집권은 안 된다, 대통합 하자’는 식으로 ‘공포’를 동원하는 겁니다. 자신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한나라당은 안 되니까 찍어 달라? 결론적으로 ‘대통합’이 아닌, 제대로 된 서민적 진보 신당을 만들어서 진보적인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그러면 민주노동당과 진보대연합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팔레스타인 위기의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있다

김용민

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태를 추적해 온 많은 전문가들은 하마스의 이번 조치(파타 산하 단체들의 무장 해제)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와 정부를 전복하려는 끊임 없는 위협과 도발에 맞선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였다”고 말한다.

지난해 1월 총선에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승리했다.

그러나 서방과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규정한 채 팔레스타인에 대한 원조를 모두 중단했다. 봉쇄와 제재가 강화됐고, 그 결과 팔레스타인인들은 더 끔찍한 가난과 절망으로 내몰렸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소속 의원과 정치인 무더기 체포·감금, 팔레스타인 지역 공습을 반복했다. 이러한 공

습으로 2006년에만 7백여 명이 사망했고, 이중 절반이 민간인, 1백41명이 어린이였다.

한편, 오랫동안 자치정부를 지배해 온 파타의 일부 지도자들, 특히 압바스와 그 측근들은 하마스 정부를 흠뻑하고 전복하려는 미국·이스라엘과 일부아랍 국가들의 음모에 적극 협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런 자들에게 수천만 달러의 자금과 무기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선출된 정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무장 세력들, 특히 파타당 치안 책임자 무함마드 달란이 이끄는 “선제 보안군”과 압바스 대통령 직속 부대인 “대통령 경호부대”도 포함됐다.

최근 폭로된 두 가지 사실은 이들의 하마스 전복 음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잘 보여 준다. 지난 6월 7일 이스라엘의 일간지 <하아레츠>는 “가자지구의 파타 고위 관리들이 이스라엘에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로부터 막대한 양의

무기와 탄약 수송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이스라엘 신문에 따르면, 파타는 이스라엘에 “무장 차량, 수백 개의 장갑 관통 RPG로켓포, 수천 발의 수류탄, 수백만 발의 소총 탄약”을 요청했다. 파타는 이 모두가 하마스를 상대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극단주의”가 문제라고 말한다. 그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한다는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총선 승리 직후부터 하마스는 오히려 실용주의적으로 처신했고, 기존 정치 구조에 통합될 뜻을 가지고 있었다. 하마스는 1년 이 넘도록 이스라엘과 일방적 휴전을 지속했고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겨냥한 자살폭탄 공격을 중단했다.

최근 <가디언>에 폭로된 비밀 보고서 — 올해 5월에 작성됐다 — 에서 알바로 데 소토 전 유엔 중동 특별조정관은 지난해 1월 총선 직후 “거국 내각”을 구성하려는 하마스의 제안을 압바스가 거절했고, 이것은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폭로했다. 데 소토는 파타와 압바스의 측근들이 미국·이스라엘·유럽연합(EU)의 원조 중단과 봉쇄를 적극적으로 교사·방조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데 소토는 이들이 “하마스가 이끄는 정부의 조속한 붕괴를 위한 … 음모”를 꾸미기 위해 미국과 협력했다

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유엔이 구성한 ‘포르트’(미·영·러·EU)은 “미국 친구들의 모임일 뿐”이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달란이 이끄는 무장 세력들이 두 차례나 쿠데타를 기도했음에도 하마스는 올해 3월 ‘메카 합의’를 통해 파타와 “통합 정부”를 구성하려 애썼다. 그러나 달란과 압바스의 측근들은 합의 사항 이행을 거부한 채 무기 비축을 계속했고 자신들의 민병대를 정부 — 중립적 인사가 이끄는 내무부 — 의 통제 아래 두길 거부했다. 그리고 서방과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이 모든 양보와 타협에도 불구하고 “통합 정부”를 외면한 채 봉쇄와 제재를 계속했다.

다국적군

하마스의 파타 무장해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였다. 그것은 또한 1년 6개월 동안 지속된 서방과 이스라엘의 봉쇄와 공격, 파타와 압바스의 내부 분열 책동에 불구하고 저항이 여전히 만만찮은 저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놀라우리만큼 신속히 파타 산하 무장 세력들 —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막대한 무기

와 자금을 지원받아 온 — 을 몰아내거나 무장해제했고, 다양한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들의 연합인 ‘인민저항동맹’은 하마스와 같은 편에 섰다. 거리에서는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파타의 패퇴를 환영했다.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지배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반동 세력이 허무하게 쫓겨나 도망치는 꼴을 지켜봐야 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과 서방의 많은 주류 언론들은 이를 두고 “미국 중동 정책의 실패”라고 말했다.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러한 실패와 수모를 만회하려 한다. 지금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 진입했고, 일부 언론은 이스라엘의 신임 국방장관 에후드 바라크가 몇 주 안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직접적 군사 개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여름에도 이스라엘은 3개월 동안 가자지구를 공습했지만 하마스를 제압하지 못했다.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를 제압하지 못했다. 파타가 통제하고 있다는 요르단강 서안지방에도 하마스는 만만찮은 기반과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하마스는 지난해 총선에서 가자지구뿐 아니라 요르단강 서안지방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만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학살을 시작한다면 가자지구뿐 아니라 요르단강 서안지방에서도 저항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가뜰이나 인기 없는 압바스를 더욱 위기로 내몰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과 이스라엘의 대응은 한편으로는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방을 분리해, “하마스 없는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 사실상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 서안지방에 지원을 집중하고 가자지구에 대해서는 봉쇄와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서방은 레바논에서 그랬듯이 이스라엘과 팔

레스타인 내부의 친제국주의 세력(압바스와 파타 내의 부패한 세력들이 수행하지 못한 과제를 유엔을 통해 이루어 할 수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다국적군 투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대안도 나름의 딜레마는 있다. 사실상 요르단강 서안지방에만 제재를 해제해 가자지구(와 하마스)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도리어 팔레스타인 대중의 환멸과 반발만 키울 수 있다. 명색이 팔레스타인 대통령이라는 자가 가자지구를 버려둔 채 서안지방을 위해서만 돈을 쓰겠다는 것은 가자지구든 서안지방에서든 팔레스타인 분열 시도에 반대하는 대중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다른 한편, <뉴욕타임스>가 꼬집었듯이 다국적군 파견은 “마땅히 군대를 보낼 만한 국가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의 ‘대(對)테러 전쟁’이 패배를 겪고 있으므로 미국뿐 아니라 다른 서방 열강들도 군사적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마흐무드 압바스

— 미 제국주의의 “자발적 앞잡이”

평화로 가는 길은 열렸는가?

2·13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아 왔던 이른바 BDA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다. 지난 16일 북한〈조선중앙통신〉은 “BDA에 동결된 우리 자금 해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IAEA 실무단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BDA 문제 해결 과정은 이라크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고 영향력도 약화하는 미국의 처지를 잘 보여 준다.

원래 미국은 BDA의 북한 계좌를 증거도 없이 불법으로 낙인 찍어 놓고는 ‘찾아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었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났다.

이란은 유엔 안보리가 정한 우라늄 농축 중단 시한을 무시했고, 5월 2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농축 활동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대이란 추가 제재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게다가 5월 25일과 6월 7일에 북한은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섰다. 시험 발사는 매우 자제된 방식이었지만,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전 미사일 발사를 상기시켰다.

북한은 BDA 문제 해결을 국제 금융 체제에 합법적으로 편입되는 신호로 봤기 때문에 ‘현금만 빼가라’는 미국의 해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 더러 자신이 싼 똥을 치워달라고 했지만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 다급해진 부시는 러시아의 푸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가 됐다. 부시는 BDA의 북한 자금이 불법이라는 낙인을 끝내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독재 국가”의 “불법 자금”을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거쳐 러시아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해야만 했다. 존 볼턴의 불평대로 미국 정부가 나서서 “불법 자금을 세탁해 준 꼴”이 된 것이다.

노무현의 궤죄죄함은 한술 더 뜬다. 노무현 정부는 BDA 문제가 난항을 겪을 때 대북 식량 지원을 유보하며 부시의 눈치를 봤다. 미국과 공조해 북한핵을 해결한다는 원칙을 바꾸지 않는 소위 “평화개척 세력”에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 찾는 격’이다.

그러나 BDA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은 결코 아니다.

첩첩산중

사실, BDA 북한 계좌 동결 해제는 2·13 합의 이후 30일 내에 해결했어야 하는데, 무려 4개월이 걸린 것이다. 이는 2·13 합의가 과거의 합의들과 달리 ‘각 단계마다 걸리는 이행 시한을 축소하고 구체화했다’는 낙관적 평가를 무색케 한다.

BDA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은 IAEA 사찰관을 복귀시키고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해야 한

다. 아마 여기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 언론이 예측하듯이 이후 과정은 첩첩산중이다. 2·13 합의에서 미국이 당장의 위기를 봉합하려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당장 핵포기 대상 프로그램 목록을 둘러싸고 충돌이 벌어질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이를 부인한다. 또, 2·13 합의에서 핵 ‘불능화’ 이행 시한과 수준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다. 그래서 북한은 합의 당일 ‘불능화’를 “임시 가동 중지”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게다가 1994년 핵위기 때보

다 북한 핵프로그램을 검증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당시는 북한 핵프로그램이 비교적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정도만 검증하면 됐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이미 핵실험까지 한 마당이다. 검증이 까다로워진 만큼 미국이 바라는 수준까지 검증하려면 이라크에서 했듯이 주석궁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압박의 목소리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사실, 미국은 북한핵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 질서를 관리하려 하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 한다. 최근 중국을 겨냥한 미일동맹이 강화됐다. BDA 문제 해결과 동시에 미국과 일본은 민간 기업들 간 군사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방위기술 개발 협약을 개정기로 했다. 이 협약은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우선 적용될 것이다.

2·13 합의의 한 발짝 진전은 미국이 힘의 한계 때문에 이리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결정적 파국도 전향적 해결도 없는 채 당분간 교착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 과정은 동북아시아에서 장기적 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그럴 것이다. 일각에서의 낙관적 판단과 달리, 2·13 합의 이후에도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은 오히려 격화했고 불안정은 심해졌다.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저항과 함께 제국주의 패권 질서에 도전하는 아래로부터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한규한

프랑스 총선 2차투표

우파와 ‘신자유주의 좌파’ 모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6월 17일 프랑스 총선 2차투표에서 예상대로 사르코지의 대중운 동연합(UMP)이 승리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압도적 승리는 아니었다. UMP와 사회당의 득표율 차이는 4퍼센트(46.36퍼센트 대 42.26퍼센트)에 불과했다. 더구나 2002년과 비교하면 UMP 의석은 45석이나 감소한 반면 사회당은 36석 늘었다.

또, 1995년 연금 개혁을 시도해 공공 부문 대파업을 초래한 전 총리 알랭 쥐페(현 환경부 장관)도 낙선해 장관직을 내놓아야 한다. 공산당은 예상외로 선전해 15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회당의 선전은 사회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라기보다는 우파 견제 심리 때문이었다. 사실, 사회당은 대중의

반신자유주의 정서를 대변하기보다는 “의회에도 다원성이 필요하다”는 소심한 구호를 내걸고 프랑수아 베이루의 중도 정당과 선거연합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심한 선거운동을 벌였다. 그래서 반신자유주의 진보 유권자의 결집에 한계가 있어, 기권율이 여전히 높았다(약 40퍼센트).

정치 대안

우파와 사회적 자유주의 좌파가 표를 양분한 이번 선거 구도는 현재 프랑스 사회의 급진화된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여전히 프랑스 노동자·민중의 대다수는

고용·불평등·환경 등 사회 이슈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여기서 진보적 해결책을 원한다고 답했다.

유럽헌법 부결과 최저고용계약법(CPE) 반대 투쟁으로 급진화한 대중 정서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급진좌파와 반신자유주의 진영의 분열과 정치적 무능력 때문에 이런 정서가 정치적으로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도 사회당은 반신자유주의 정서를 대변하는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회당 지도부는 대부분 토니 블레어 식 ‘좌파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사르코지는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프랑스 대중운동은 이미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일례로 학생 운동은 7월에 대

지난해 프랑스를 흔들었던 CPE 반대 투쟁 — 선거에서 우파가 승리했지만 급진화한 대중 정서는 여전하다

규모 토론회를 열어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 반대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투쟁에서 급진좌파와 반신자유주의 진영이 사르코지 ‘개혁’과 사회당의 사회적 자유주의 둘 다에 맞선 정치 대안을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영욱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

국제 공산주의 운동 I

지난 두 칼럼은 옛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다뤘다. 이번 칼럼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와 운명을 다루겠다.

국제주의는 항상 맑스주의와 진정한 사회주의의 근본 원칙이었고, 맑스주의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세력을 국제적으로 조직하려 했다.

1914년에 제2인터내셔널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대부분 제1차세계대전에서 자국 지배계급을 지지하며 국제주의를 배신하자 레닌은 새로운(제3) 인터내셔널의 필요성을 재빨리 깨달았다. 그러나 상황 — 주로는 전쟁과 세력 부족 — 때문에 이 과제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15개월 뒤에야 실현됐다.

1919년 3월 러시아가 내전에 휩싸여 있고 혁명의 물결이 유럽을 휩쓸며 고조되고 있을 때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제3) 인터내셔널 1차 대회가 열렸다. 그 대회의 목표는 각국 정당들의 단순한 연맹체 이상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코민테른으로 알려지게 된 그 인터내셔널은 국제 노동계급이 전 세계에서 승리하도록 이끌 수 있는 단일한 국제 혁명 조직 — 러시아 볼셰비키당을 세계 규모로 확대한 것 — 이 돼야 했다.

1차 대회 당시의 코민테른은 여전히 비교적 취약했다. 러시아 공산당을 제외하면, 1차 대회에 참가한 외국 공산당 대표들은 헝가리·폴란드·라트비아·에스토니아 등 대부분 동유럽 나라의 공산당 소속이었다. 서유럽 등지에서 온 대표들은 주로 소규모 그룹이나 경향 소속이었다. 그들은 아직 제대로 정당을 건설하지 못했거나 많은 경우 아직 완전한 공산주의자들도 아니었다.

붉은 2년

그러나 1920년 7월 2차 대회 때는 대회에 참가한 공산당의 수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공산당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지도 크게 늘었다. 특히 독일에서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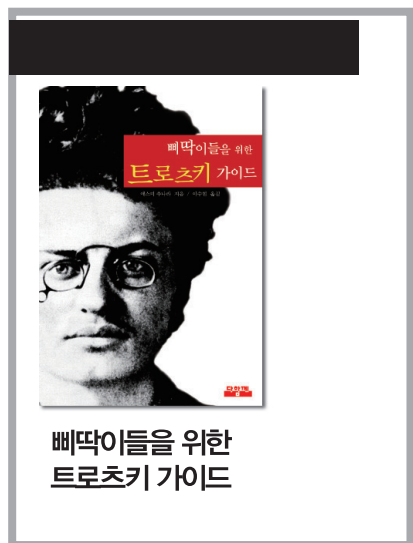
이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국제 노동계급의 조직 역사에서 최고 정점에 이르렀고, 그 때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자본가 계급의 지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등장했다.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 듯했다. 세계 체제의 심각한 총체적 위기, 국제 노동계급의 전투성과 의식성의 급격한 고양, 수많은 나라 혁명적 단체들 간의 강력한 연계 구축.

비극이게도 코민테른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기회는 유실됐다.

왜 그랬는가? 근본적으로 그것은 혁명 지도부의 실패 때문이었다.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각각 결정적 패배가 있었고, 두 경우 모두 노동계 지도자들의 수동성

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919~20년의 “붉은 2년” 동안 대중파업과 대규모 공장점거가 잇따랐다. 특히, 토리노와 밀라노에서 그랬다. 그러나 주요 노동계급 정당인 이탈리아사회당 — 코민테른 가입을 타진하던 — 의 지도부는 손놓고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혁명적 기회가 유실됐을 뿐 아니라 끔찍한 반동적 공세가 시작됐다. 붉은 2년에 이어 검은 2년이 뒤따랐고, 검은 2년은 무솔리니 파시스트들의 권력 장악에서 절정에 달했다.

진정한 혁명 정당의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탈리아의 맑스주의자들은 전략적으로 뒤늦은 반면 전술적으로는 조급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혁명적 좌파는 사회당의 동요하는 개량주의 지도부와 너무 오랫동안 함께했다. 다른 한편으로 1921년에 그 지도부와 결별하고 실제로 공산당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너무 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개량주의 진영에서 끌어올 수 있는 세력을 최소화하고 말았다.



독일에서는 혁명 과정이 더 오래 걸렸지만 결과가 재앙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독일 혁명은 1918년 10월 키일 군항 수병들의 반란으로 시작됐다. 이 반란은 독일 군대 전체로 들불처럼 번졌다. 몇 주가 채 안 돼 카이저[독일 황제의 칭호]가 퇴위했고, 권력은 독일사민당 지도자들에게 넘어갔다.

1919년 1월 혁명적인 스파르타쿠스동맹(독일공산당의 전신)은 베를린에서 봉기를 일으켜 이 민주주의 혁명을 노동자 혁명으로 전환시키려 했다. 사민당 정부는 자유군단이라는 우익 민병대와 손잡고 이 때이른 봉기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스파르타쿠스동맹의 지도자인 칼 립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가 살해당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당시 독일 최고의 맑스주의자이자 혁명가였다.

사민당 정부가 지도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계속 살아남았지만, 혁명적 위기도 지속됐다. 1920년 3월 우익 민병대가 공화국을 무너뜨리려고 카프 무력정변을 일으켰지만 전국적인 총파업에 의해 좌절됐다.

그 뒤 엄청나게 성장한 공산당이 1921년 이른바 3월 행동이라는 또 다른 혁명적 공세를 감행했다. 이 투쟁도 때이른 것이었고 역시 패배했다.

독일 사회의 만성적인 불안정은 지속됐고, 위기는 1923년 여름과 가을에 극도로 악화했다. 당시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극단적이었다. 1923년 1월에 1달러당 1만 8천 마르크였던 환율이 6월에는 10만 마르크, 12월에는 4조 마르크로 폭등했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손수레로 실어 날랐고,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급증했다.

그러나 두 번이나 때이른 봉기에 실패한 공산당 지도자들은 스탈린 등 러시아 지도자들의 조언에 따라 이제는 아무 일

도 하지 않았다. 결정적 순간은 그냥 지나갔고, 독일 자본주의는 적어도 5년 동안 안정을 되찾았다.

그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만약 독일 혁명이 성공했다면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의 자본주의도 급속하게 무너졌을 공산이 크다. 그랬다면 강력한 혁명적 추진력이 형성됐을 것이고, 아마 오늘날 우리는 사회주의 세계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독일 혁명의 패배로 제1차세계대전 종전 직후의 혁명적 위기는 끝나고 러시아 혁명은 확실히 고립됐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던 관료적 퇴보와 스탈린주의 경향이 엄청나게 강화됐다.

이탈리아와 독일, 그 밖의 다른 유럽 나라들(예컨대 헝가리와 불가리아)에서 혁명이 실패한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레닌과 볼셰비키가 수십 년 동안 습득한 혁명적 전략·전술의 교훈이 채 4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유럽의 신생 공산당들에게 전수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있다.

불행히도, 그 뒤의 시기는 스탈린주의의 방법과 정책 등이 국제 운동에 전수되기가 훨씬 더 쉬웠음을 보여 주었다.

이것이 코민테른과 국제 노동계급에 미친 결과는 다음 칼럼에서 다루겠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호 존 몰리뉴 칼럼에서 옮긴이의 착오로 ‘러시아 혁명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제목을 ‘옛 소련은 왜 몰락했는가?’로 잘못 달았기에 바로잡습니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아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도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증해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50만 명이 총파업 지지 행동에 참가하다

6월 13일 남아공 전역에서 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2주째 진행중인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공항 노동자, 택시와 버스 노동자, 환경미화원, 전력 노동자를 포함해 다양한 노동자들이 하루 연대 파업을 하고 시위에 나섰다. 심지어 경찰노조도 파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여론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요구한 12퍼센트 임금인상과 의료·주거 수당 증액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아공에서 아프리카국민회의(ANC)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은 대부분 소도시 빈민들이 주도했다. 이제 이 투쟁에 강력한 조직 노동자들이 결합하고 있다.

파업을 주도하는 코사투(COSATU: 남아공노동조합연합)는 임금인상 요구를 1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낮췄지만 정부는 7.5퍼센트를 타협안으로 내놔다. 코사투는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임금인

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타협안을 거부했다.

타보 음베키 정부의 공공서비스 장관 몰레게티는 파업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그는 필수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파업 참가를 금지하는 노동법원 판결을 이용해 지금까지 6백 명 이상의 파업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그는 남아공공산당(SACP) 소속이지만 SACP 활동가들은 이번 파업에서 핵심적 구실을 하고 있다. 곧 열릴 SACP 전당대회에서는 SACP 장관이 파업 노동자들을 탄압한 것과 SACP의 ANC 정부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외신 종합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시 거리를 점거한 노동자들

맑스코뮤날레

2년마다 열리는 맑스코뮤날레는 급진좌파 단체, 좌파 연구소와 관련 교수들, 자율주의 단체, 좌파적인 대학생 등이 모여 현대 자본주의의 대안 등을 논의해 왔다. 제3회 맑스코뮤날레가 올해 열린다.

일시 : 6월 28일~30일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웹사이트 : <http://www.communnale.net>

21세기 혁명과 전략

발표자 : 최일봉<맛불> 편집자,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책갈피) 저자)

자이 자일스 웡파론(태국 출라롱콘대학교 교수, 태국 '노동자민주주의' 창설자)

일시 : 6월 28일(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지역사회포럼

서울 서부

87년 6월 항쟁 20주년:
민주주의 시계는 어디쯤 와 있는가?

일시: 6월 22일(금) 오후 7시 45분

연사: 전지윤(주간 <맛불> 편집자)

장소: 토츠(신촌역 3번출구)

참가비: 3천 원

문의: 017-267-0400

서울 중부

기업 세계화와 식품 위기

일시: 6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연사: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후수의사연대' 편집국장)

장소: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센터(한성대

입구역 7번출구 동소문우체국 5층)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인천

환경 재앙—
기후 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일시: 6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연사: 장호중(주간 <맛불> 기자)

장소: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4층 교육실

문의: 010-3083-5508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증면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소식 · 보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

지난 6월 14일 노무현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화물·덤프·레미콘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이 지난 7년간 줄기차게 투쟁하며 요구해 온 것에 답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으로 설정해 노조가 아닌 단체 결성만을 인정했고, 단체 행동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50년 전부터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해 왔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이 노동조합들은 모조리 해산해야 한다.

법안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만 노동3권을 인정하고, 보험모집인과 학습지교사는 기만적인 노동2권만 인정하고, 화물·덤프 노동자들은 아예 제외시켰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시키려는 사악한 시도인 것이다.

이것이 '보호'법이라는 강변에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갈취하는 시정잡배·모리배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명백한 노동자다. 그들은 대부분 IMF 경제 위기 전까지만 해도 노동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IMF 위기 이후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6월 18일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벌인 특수고용노동자들

됐고 기업주는 이를 이용해 노조를 파괴하고, 각종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4대 보험 책임을 회피하고, 언제든 지 계약을 해지했다.

노동자들의 조건은 훨씬 더 열악해졌다. 심지어 화물노동자들은 1인당 평균 3천6백만 원의 빚을 지고 있고, 전체 화물노동자의 25퍼센트가 신용불량자이다.

그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난 7년간 온갖 탄압과 고난을 무릅쓰며 노동3권 쟁취 투쟁을 계속해 왔다. 노무현은 대선 공약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약속했지만 지난 5년 동안 노동자들을 배신해 왔다. 그러다 결국

기만적인 '보호'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6월 18일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에서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마포대교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연대하면서 1박2일간 여의도에서 노숙농성과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화물·덤프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건설 현장과 물류를 마비시키며 6월 말 금속노조 한미FTA 반대 파업과 연결된다면 노무현에게 끔찍한 악몽이 될 것이다.

김지태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투쟁의 모범

이랜드·뉴코아 노동자 투쟁에 승리를

6월 10일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 노동조합 2천여 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당 계약해지·아웃소싱(외주화) 저지' 등을 요구하며 공동 파업을 한 데 이어, 6월 17 i 18일에도 2차 파업을 진행했다.

뉴코아 노동자들은 용역강패까지 동원한 강제 용역 전환 시도에 부분 파업, 게릴라 파업, 계산대 앞 팻말 시위 등으로 맞서고 있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 투쟁은 비정규직 악법 시행에 맞선 투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3단 전기봉까지 휴대한 용역강패들은 "일하게 해달라"며 울부짖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무참히 폭행했다.

"노동조합은 성경에 없다"며 악랄하게 노조를 탄압해 온 사용자 박성수는 이랜드 계열사들을 '비정규직 피눈물의 땅'으로 만들어 왔다.

지난해 문을 연 이랜드 계열사 '2001 아울렛' 부평점은 전체 직원 1천 명 중 33명만 정규직이다. 이랜드는 최근 비정규직 악법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라며 5백 명이 넘는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 3백 50여 명을 계약해지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하자 이랜드는 홈에버 매장에서 "직무급제 정규직 채용" 공고를 냈다.

직무급제 채용 대상은 근무 경력 2년 이상만 해당된다. 그나마 팀장과 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새롭게 직무급제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해도 그동안 일한 근속연수는 무시되고 306개월의 수습 기간에 얼마든지 해고될 수 있다.

이랜드 일반노조는 직무급제는 "노조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악질적인 사기극"이라며 "평생 비정규직화 시도"에 속지 말고 단결해 투쟁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랜드 일반노조는 2000IJ2001년 2백65일 파업을 통해 불법파견까지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쟁취한 바 있다. 구속자가 10여 명이나 되는 혹독한 탄압을 견뎌내면서 얻은 성과였다.

자랑스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 전통을 이어받은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 노조는 6월 말 전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조 가입이 늘어나고 비조합원과 심지어 소비자들의 지지도 늘고 있는 지금,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한다면 비정규직 악법에 맞서는 노동자들을 크게 고무할 것이다.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주요 매장을 점거해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는 전면연좌(점거) 파업이 승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일 것이다.

강철구

독자편지

현지에서 본 '사회주의' (?) 중국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라고들 한다. 그러나 중국에는 여느 자본주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 등 자본주의 나라에서 만든 상품이 많이 있고, '초일류 노동자 탄압' 기업 삼성이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공헌 제일 많이 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에서 반(反)정부성 글을 쓰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PC방 이용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 그래서 나도 내 여권을 PC방 주인에게 제시하고, 주인이 나의 여권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한 다음에야 입장할 수 있었다.

가장 자유로울 듯한 대학도 마찬가지였다. 한편으로는 삼성 채용박람회, 취미 활동에 관한 포스터도 있지만 학내 군데군데 경찰차가 세워져 있고, 학교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다.

내가 살던 도시 항주는 '인간 천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인간 천당'에조차 조직폭력배들이 있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에게 "사장님 천 원만 달라"고 한국말로 구걸하는 중국인들을 볼 수 있다.

공산당원들조차 그들의 체제가 '진정 사회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 할 만큼 자본주의가 일상이 됐고, 성도의 유명한 기업인이 술자리에서 성도 시장을 부르면 반드시 달려온다고 장담할 만큼 국가 관료와 자본가가 유착돼 있다.

이런 중국에서 6개월 동안 살면서 나는 '중국은 사회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중국 정부가 자신들이 대표한다고 말하는 노동계급에 의해 타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시장경제를 도입한 뒤로 심해진 빈부격차를 해결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서서히 완성시키면 혁명 없이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 나라에 유럽(상하이)과 아프리카(윈난성)가 공존한다'고 말할 만큼 빈부격차가 심하고, 독립노조 설립이나 공산당에 반대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되고 있다. 독립노조가 서서히 건설되고 있고,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산당이 실시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는커녕, 기존의 개혁조차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할 듯하다.

따라서 중국의 노동계급이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로서 농민과 빈민들을 지도해 1949년과 다른,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권력'을 탄생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김재원

이 글의 전문은 맞팔 웹사이트 (www.coucterfire.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호 알렉스 캘리니코프 칼럼에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푸틴"은 "… 블라디미르 푸틴"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독자편지를 통해 이를 지적해 주신 김태현 동지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 탄압을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가 정치자금법 중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으로 민주노동당을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후원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정당의 후보를 후원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것도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한 것인데 말이다. 재벌의 '검은 돈'과 달리 언론노조는 "세상을 바꿔 달라는 것" 말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류 언론들은 언론노조 전 총무 부장의 개인적 횡령과 언론노조의 민주노동당 후원을 뒤섞어 보도함으로써 정당한 정치자금 후원을 불법 뇌물 수수인 양 호도한다.

그리고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해 굶어모은 수백억 원을 '차떼기'로 반노동자 정당에 건네는 것은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정치 후원만 탄압하려 한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4년에 개악된 것이다. 따라서 그 전의 후원금은 순전히 법적으로만 따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검찰은 2004년 이전의 일 뿐 아니라, 악법을 피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이용해 후원한 것까지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식이면 언론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조들도 문제 삼을 수 있고,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수많은 민주노동당 후보들

도 문제 삼을 수 있고,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 출마를 가로막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탄압은 단지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한미FTA 반대 운동과 진보진영 전체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반대 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민주노동당을 탄압해 위신을 떨어뜨리고 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

위신

그래서 '한미FTA 문건 유출 사건'을 빌미로 심상정 의원의 전화와 팩스 내역을 뒤지고 한미FTA 반대 운동 참가자들을 소환하고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범여권의 통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지지율 2위를 기록하는 등 열우당 왼쪽의 공백을 메우는 조짐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질 듯하다.

삼성 'X파일' 사건 때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폭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삼성SDS가 학교에 납품한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해킹' 혐의로 기소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과 인터넷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고 추적할

수 있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하려 하는 노무현 정부가 '해킹'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겨운 위선이다.

지난 몇 달 동안 계속된 이런 탄압에 민주노동당과 한미FTA 반대 운동 세력 등 진보진영은 훨씬 적극적으로,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불현듯 운동이 악화돼 있음을 깨닫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언론노조는 "명운을 걸고 민주노동당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도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금속노조 파업 등 한미FTA 반대 운동을 굳건히 건설하면서, 회피하지 말고 이런 탄압에 정말로 맞서야 한다.

장호중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박준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을 석방하라

6월 18일 오전 경찰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 박준의 동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경찰은 박준의 동지를 '주체사상 지하조직 사건'으로 마녀사냥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박준의 동지의 부모까지 불러내서 박준의 동지에게 혐의를 인정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한다.

박준의 동지는 옳게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대공분실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와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회가 긴급하게 호소한 6월 19일 항의 집회에도 40여 명이 함께했다.

노무현 정부는 올해 평화 사진 작가 이

시우 씨, 인터넷 현책방 운영자 김명수 씨 등을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구속했다. 특히 이시우 씨는 표현의 자유 탄압에 반대하며 48일 동안 옥중 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탄압이 노리는 바는 명백하다. 6월 말 한미FTA 반대 투쟁과 정부의 철군 사기극에 반대해 곱돌거리는 반전 운동의 예봉을 꺾으려는 것이다. 지리멸렬과 아귀다툼이 끊이지 않는 기성 정치권 위기의 회생양을 삼으려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

조명훈

저항운동의 축제

맑시즘2007은 50여 개의 토론과 진보적 영화, 음악, 사진전 등이 어우러지는 저항운동의 축제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장입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요 주제>>>

■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듣는다 ■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말한다 ■ 2·13 합의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 부시의 전쟁과 세계 반전 운동 ■ 현대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 ■ 돌아온 전략 문제 - 사회주의자들과 운동 ■ 신자유주의 시대,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 ■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정치경제학 ■ 냉전 이후 북한 어디로 가는가? ■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미래인가? ■ 일본 역사 왜곡과 군국주의화에 맞선 투쟁 ...

참가비 하루 9,000원 / 나흘 30,000원

할인 가격: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기투쟁작업장 노동자: 하루 4,000원 / 나흘 13,000원
대학생, 실업자: 하루 6,000원 / 나흘 20,000원

맑시즘 2007

주요 연사>>>

린지 저먼 | 영국 '전쟁저지연합' 사무총장, 영국 '리스펙트' 런던시장 후보
존 리즈 | 영국의 급진좌파 정당 '리스펙트' 사무총장
문성현 |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노회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정태인 | 성공회대 겸임교수, 전 청와대 비서관
이강택 | KBS PD
민세원 | 전국철도노조 서울KTX승무지부장
정성진 | 맑시즘의 경제학자,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희수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슬람> 저자
유달승 |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
우석균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7월 14일(토) - 7월 17일(화)
장소: 고려대학교 주최: 다함께

더 자세한 내용과 참가 신청은
'맑시즘' 웹사이트(<http://www.marxism.or.kr>)를 참조하십시오.

